

# 북한이탈주민 실태 조사를 통해서 본 북한의 사회구조

박현주 | KDI국제정책대학원 | hpkdis@gmail.com

## I. 서론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북한의 기근과 집단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97년에 정점에 이르렀지만, 현재까지 북한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다. 또한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현실은 북한의 핵개발 및 실험 문제로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 노력과 동시에 남북한 사회의 건설적인 공동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중차대한 정책 과제는 바로 북한 경제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고는 북한 경제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으키는 데에 필수적인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정책적 함의를 유추해보는 데 그 목적을 둔다.<sup>1)</sup>

경제와 사회 발전의 성공 여부가 제도의 수준과 그 질에 달려 있다는 데 이견을 제기하는 학자는 없을 것이다(North, 1990; Acemoglu and Robinson, 2012 등 참조). 그런데 북한 사회의 경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성취해갈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사회적 신뢰의 수준이 확보돼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기반하는 가격 메커니즘이 자유롭게 기능하는 한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업 계약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경제 성장 및 발전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신뢰나 제도까지도

1) 본 연구는 통일 한국의 보다 바람직한 사회적 통합과 발전을 예비하는 노력에도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자본이란 신뢰와 상호 부조의 원리에 기반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재화를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경제 및 문화적 자본을 말한다 (Coleman, 1990).

자연스럽게 생성될 것으로 보는 셈이다. 하지만 시장경제 기제는 오히려 사회적 신뢰가 그 기반이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법 체계와 집행으로 상거래 관계를 규제할 수 있지만, 법과 공권력의 힘만으로 모든 거래를 항시 감시, 감독 및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과도하게 큰 비용이 들 것이다. 그리고 거래의 규모가 커지고 성취하고자 하는 경제성장의 레벨이 높을수록 경제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신뢰와 가능한 협업수준이 높아야 할 것이다.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며 심화되었을 북한 주민들의 사회병리적 상태는 고통과 상처(pain and disfigurement)의 측면에서 보면 단기간 동안의 대량학살이 희생자들에게 끼칠 수 있는 고통과 상처의 수준보다 클 수 있다(Natsios, 2001). 따라서 북한의 사회적 자본 또는 신뢰수준의 실상을 보다 깊은 차원에서 꿰뚫어 보고 이해하는 것이 북한 경제사회의 중장기적인 발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틀과 연구방법론<sup>2)</sup>

경제사회의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려면 좋은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사회적 신뢰이다(Smith, 2000[1759] Coleman, 1990; Putnam, 1993; 2000; Fukuyama, 1995 등 참조).<sup>3)</sup> 아담 스미스(2000[1759])가 인간애, 자비심, 또는 동료애(fellow feeling)라고도 표현한 공감의 능력은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의 일부이며, 이러한 능력이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살아서 기능하는가가 그 사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결정하고 또 그 사회가 성취할 수 있는 발전과 번영의 정도를 가능할 수 있게 한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은 보다 높은 수준의 비즈니스 협력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가능하고, 그렇게 정교하고 복잡한 협업관계는 보다 깊은 차원의 신뢰를 요구하기 마련이다. 신뢰 사회에서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간의 계약이나 약속을 어김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단기적 혹은 즉각적 이익보다 기존의 법, 제도와 규범에 따라 좋은 평판을 쌓아가며

2) 본절에서 발전시키는 이론적 틀에 대한 논의는 김동엽 외(2015) 편의 제8장인 박한주, 「북한의 비도덕적 가족주의?」장에 기반하여 작성하였다.  
3) 사회적 자본 연구의 개척자인 Coleman(1990)은 사회적 자본을 개인의 기회주의적 성향을 조절하여 거래 비용의 감소를 가져오는 시민참여의 규범과 관계망으로 정의한다. Putnam(1993; 2000)도 유사한 정의에서 출발하는데, 시민, 사회, 조합 등의 조직들이 생겨나고 또 그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평적 시민 네트워크가 늘어나고 경제도 번영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Fukuyama(1995)도 이렇게 신뢰에 기반하는, 특히 민간부 문에서의 협력의 문화와 기업화된 조직의 출현과 성장 등이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끈다고 말한다.

비즈니스를 하는 행위의 편익이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뢰가 부족한 사회에서의 비즈니스는 높은 거래비용 등을 유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만큼의 사회적 시간, 자원,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현존하는 어떤 공동체 또는 시장경제 체제도 개개인의 레벨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계산적인 행동들이 모아진 것만으로 만들어진 경우는 없다. 사유재산권과 개인의 자유, 계약의 집행 등을 담보하는 국가의 역할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감의 능력이 경제사회 행위자들의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경제도 잘 기능하거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North and Thomas(1973)는 효율적인 경제조직의 출현을 서구 세계의 성장과 발전 역사의 핵심요소로 제안하지만, 부의 창출을 위한 조직의 성공은 구성원들이 종속된 사회에서 서로 협력하여 함께 배워갈 수 있느냐에 달렸음을 인정한다. 인류의 역사에서 나타나듯이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협력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현재 북한사회의 주민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조정하는 능력이나 이를 가능케 하는 신뢰수준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판단하여 북한 사회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의 목적은 북한 사회와 관련하여 비도덕적 가족주의로 특징되어지는 사회병리적 증후군(syndrome)의 실태와 정도를 진단하고, 이 문제가 북한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변화에 전략적, 한계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마땅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배경에서, Banfield(1958)는 이러한 북한 사회의 문제를 깊이 통찰하는 데 있어서 직관적이고 강력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Banfield(1958)의 ‘비도덕적 가족주의 분석틀’은 Amartya Sen의 보통 시민의 자유와 발전역량(freedom and increased capacity of ordinary citizens)의 측면에서 북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관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과 더불어 북한 문제의 긴급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고찰시킨다. 현재 북한 사회의 진화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이론적 틀은 Banfield(1958)가 남부 이탈리아 지역에서 발견한 직계가족의 물질적이고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도덕적 가족주의 행동패턴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경제발전의 수준이 높다면 그만큼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협회, 조직 또는 협업 등을 가능케 하는 신뢰관계가 담보되어야 한다. 경제사회의 발전과 사회적 자본 간에 존재하는 상관관계의 무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Banfield(1958)가 언급하듯이 “마을 주민이 공공재 또는 ... 직계가족의 즉각적 이익을 넘어서는 어떤 목표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는 것은 비도덕적 가족주의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제약이다.<sup>4)</sup>

4) Banfield(1958)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의 비도덕적 가족주의가 다음 3가지 요소의 복합으로 기인되었다고 생각한다: ① 높은 사망률과 조기 사망에 대한 두려움, ② 대가족제도(지급 농업에서 생존과 인청의 메커니즘)의 부재, ③ 불안정한 토지 보유 조건.

### III. 북한이탈주민 실태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 실태 조사 결과는 북한의 사회적 자본 또는 신뢰의 수준의 문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비도덕적 가족주의적인 사회병리적 증상을 나타내는 행태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sup>5)</sup> 가족이 모든 사회의 기본 단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가족 단위의 공동체를 넘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조직도 만들고 협업을 하는 등 경제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이 근대 산업사회의 근간인데, 북한이탈주민을 통해서 본 북한 사회에는 그만큼 정도의 사회적 자본 또는 신뢰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가 수행한 실태 조사 결과의 핵심적 발견내용을 중심으로 축약적으로 정리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질문은 “북한 사람들이 직계가족을 넘어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서로 돕는지, 측은지심 또는 공동체의식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을지” 등을 가늠해 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북한에서 있을 때부터 현재까지 부모·자녀·형제자매 등 직계가족 이외에 이모·사촌 등 친척이나 친구·이웃 등의 탈북을 도운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절대다수인 83.7%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타인의 탈북을 도운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탈북을 지원하는 단체나 조직에 소속되어 다른 사람들의 탈북을 도왔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북한이탈주민의 89.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탈북이라고 하는 행위와 과정 자체의 위험성 및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상 직계가족 구성원 이외에는 단체나 조직 등을 통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적 차원에서도 타인들을 돕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살 당시, 직계가족 외에 친척·이웃·사회에서 믿고 신뢰하는 분이 있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27.4%인 반면, 그런

<표 1> 북한에 있을 때부터 현재까지 직계가족 외 친구·이웃의 탈북을 도운 적이 있으십니까?

	빈도	퍼센트(%)
있다	165	16.3
없다	845	83.7
합계	1,010	100.0

5)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들이 북한 사회 일반 주민들의 사회심리적 실태를 얼마나 가깝게 보여주는가 하는 대표성이 이슈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설문조사 표본 설계 시 연구 대상자들을 연령, 북한 출신지역, 북한에서의 학력, 북한 거주 시 주업과 부업의 여부, 남한 입국연도 등으로 나누어 이들의 북한 거주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한계와 부족한 점이 존재하지만 북한에서 직접 통계자료를 산출하거나 공유받을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그래도 유효한 정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북한 사회 내면의 실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석의 창(analytical window)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다.

〈표 2〉 재북 당시 직계가족 외 친척·이웃·사회에서 믿고 신뢰하는 분이 있었습니까?

	빈도	퍼센트(%)
있다	277	27.4
없다	733	72.6
합계	1,010	100.0

분이 없었다고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72.6%에 달하였다(표 2 참조). 이는 북한 사회의 절대다수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예컨대 롤모델(role model)로 바라보는 분을 만나보지 못한다는 말이다. 특기할 만한 사실이 있다면 그래도 북한에서 전문학교나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각각 40.0%, 35.3%로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재북 시 타인 중 믿고 신뢰하는 분이 있었다고 응답한 것이다.

“북한에서 살 당시 존경하고 따르던 상급자 또는 선배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위에서 살펴본 “친척·이웃·사회에서 믿고 신뢰하는 분이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긍정적으로 답한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20.4%에 불과한 반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79.6%에 달한다(표 3 참조). 북한에서 전문학교나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각각 30.0%, 37.3%로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재북 시 존경하고 따르던 상급자 또는 선배가 있었다고 하여 이 점 역시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북한에 있을 당시, 만약 직계가족 외에 친척이나 이웃 혹은 모르는 사람이 당국으로부터 억울한 대우를 받는 것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 3〉 재북 당시 존경하고 따르던 상급자 또는 선배가 있었습니까?

	빈도	퍼센트(%)
있다	206	20.4
없다	804	79.6
합계	1,010	100.0

〈표 4〉 표 1, 2, 3을 합친 결과(Showing overall low civic capacity)

응답 내용	있다(%)	없다(%)
1. 타인의 탈북 도운 경험 (Ever provided Defection Assistance for Strangers?)	16.3	83.7
2. 재북 당시 직계가족 외에 친척·이웃·사회에서 믿고 신뢰했던 사람 유무(Trusted anyone outside of nuclear family while residing in North Korea?)	27.4	72.6
3. 재북 당시 존경하고 따르던 상급자 또는 선배 유무 (Held anyone in superior rank/status in esteem?)	20.4	79.6

전체 1,010명 중 44.8%의 북한이탈주민이 ‘잘못된 처벌 및 대우를 알리고 싶지만, 두려워 못 본 척 넘어간다’고 하였고 40.9%는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못 본 척한다’고 응답하였다(표 5 참조). 반면 ‘당국에 잘못된 처벌 및 대우에 대해 항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3.7%에 그쳐, 85% 이상의 응답자가 당국으로부터 억울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당국이나 당국자의 소위 과실죄에 대한 보복 등을 두려워하여 나서서 중재하거나 도우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정신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대로 직계가족 외에 친척, 이웃 또는 사회에서 만난 상급자 또는 선배 중 신뢰하거나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대답한 사실 등과 같이 감안하여 생각하여 볼 때, 북한 사회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북한에 있을 당시 “개인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집단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는지”라는 질문에 전체의 51.4%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개인의 이익이 아니면 노력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표 6 참조). 한 발 더 나아가, 전체 표본집단의 62.1%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의 주민으로서 공적인 문제에 심각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적인 일은 정부나 관료들만의 몫일 뿐이라고 응답하였다(표 7 참조).

다음으로, “적발될(들킬) 가능성이 없다면 북한에서 법은 무시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 표본집단인 1,010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62.0%가 ‘적발될 위험이 없는 경우, 아무도

〈표 5〉 북한에서 직계가족 외에 친척이나 이웃 혹은 모르는 사람이 당국으로부터 억울한 대우를 받는 것을 목격했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	%
잘못된 처벌 및 대우를 알리고 싶지만, 두려워서 못 본 척 넘어간다	452	44.75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못 본 척한다	413	40.89
당국에 잘못된 처벌 및 대우에 대해 항의한다	138	13.66
모름/무응답	7	0.69
합계	1,010	100.0

〈표 6〉 북한에서 귀하의 개인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집단 또는 사회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빈도	%
그렇다	491	48.6
아니다(개인의 이익이 아니면 노력하지 않는다)	519	51.4
합계	1,010	100.0

〈표 7〉 북한에서 공적인 일은 정부나 관료들만의 몫이며 일반 시민이 공적인 문제에 심각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
그렇다	627	62.1
아니다	383	37.9
합계	1,010	100.0

〈표 8〉 북한에서는 적발될 가능성이 없다면 법은 무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
적발될 위험이 없는 경우 아무도 지키지 않을 것이며 나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	626	61.98
준법정신이 중요하므로 법을 지킬 것이다	384	38.02
합계	1,010	100.0

〈표 9〉 북한의 관료들이 처벌받지 않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면, 뇌물거래를 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빈도	%
그렇다	801	79.31
아니다	209	20.69
합계	1,010	100.0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며 나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답하였다(표 8참조). 이는 북한 사회의 거래비용이 클 수밖에 없음을 방증해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하겠다. 그리고 준법정신의 수준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도 북한에서의 최종 학력 차이가 큰 결과적 차이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관료들이 처벌받지 않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면, 뇌물거래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표본집단의 79.3%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표 9 참조). 그런데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북한에서의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더 관료들이 기회주의적인 뇌물거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시장에서는 금전거래를 기반으로 동업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1,010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32.5%가 ‘매우 많다’, 40.8%가 ‘종종 있다’라고 답하여, ‘별로 없다’(14.4%) 또는 ‘거의 없다’(12.4%)라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표 10〉 북한의 시장에서 금전거래를 기반으로 동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빈도	%
매우 많다	328	32.48
종종 있다	412	40.79
별로 없다	145	14.36
거의 없다	125	12.38
합계	1,010	100.0

〈표 11〉 북한의 시장에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동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빈도	%
매우 많다	153	15.15
종종 있다	432	42.77
별로 없다	299	29.6
거의 없다	126	12.48
합계	1,010	100.0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이는 소위 ‘고난의 행군’ 이후에 문자 그대로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증가된 ‘장마당’ 등에서의 경제활동과 거래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금 더 뜻밖이라고 보이는 결과는 북한의 시장에서는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동업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나왔는데,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15.1%가 ‘매우 많다,’ 42.8%가 ‘종종 있다’라고 답하여, ‘별로 없다’(29.6%) 또는 ‘거의 없다’(12.5%)라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표 11 참조). 여기에서도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북한의 시장에서 금전거래를 기반으로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는 응답이 나온 것은 고무적이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부족한 대로나마 신뢰에 기반하고 또 쌓아가는 동업행위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어서, 이는 잘 보존하고 키워가야 할 긍정적인 사회문화적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공공정신이나 가치의 추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시행착오를 통해서나마 시장에서 반복된 거래행위를 함으로써 ‘계몽된’ 이기심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를 형성해갈 수 있다면 이는 다분히 건설적인 변화일 것이다.

“북한에 있었다면 이웃이나 남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직계가족의 먹고사는 문제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책임지는 가장 및 배우자와 타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직계가족의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타인을 돕는 가장 및 배우자 중에서 어느 편이 더 좋은 배우자라고



〈표 12〉 북한에 있었다면 다음 중 어느 편이 더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
이웃과 남을 희생하더라도 가족의 안위가 우선인 가장 및 배우자	690	68.32
직계가족의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타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돕는 따뜻한 가장 및 배우자	320	31.68
합계	1,010	100.0

〈표 13〉 북한의 동업자 간에는 신뢰가 관계의 기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
그렇다	666	65.9
아니다	344	34.1
합계	1,010	100.0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68.3%가 ‘이웃과 남을 희생하더라도 가족의 안위가 우선인 가장 및 배우자’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표 12 참조). 반면 31.7%의 북한이탈주민만이 ‘직계가족의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타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돕는 따뜻한 가장 및 배우자’를 선호하였다. 이는 북한에서 살 당시 역경 속에서 직계가족의 먹고사는 문제가 보장되어 있지 못했던 현실에서 비롯된 사회심리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anfield(1958)가 강조하였듯이, 비도덕적 가족주의적인 사회심리 상태는 부도덕하다기보다는 당장 생존 자체가 불확실한 눈앞의 냉엄한 현실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단기적이고 물질적인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정신적 병리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질문은 “북한에서 거주할 당시의 생활경험을 기반으로, 동업자 간에는 신뢰가 관계의 기반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인데, 응답자의 65.9%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였다(표 13 참조).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절반을 훌쩍 넘는 수의 응답자가 동업자 간 관계의 기반이 신뢰라고 표한 것은 북한의 실태를 반영하였다기보다는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을 때의 당위적인 가치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 IV. 북한의 사회관계와 북한 주민의 사회심리적 상태

가족이 사회의 기본단위이고 어떤 규모나 종류의 경제공동체도 가족경제공동체만큼 복원력

(resilience)이 강한 단위는 없으므로, 가족공동체의 가치와 역할을 떠나서 경제의 유지와 발전을 생각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공동체를 넘어서는 공동체의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담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에서 이미 강조한 대로, 각 경제주체의 이익창출 동기가 경제성장에 동력을 제공하지만, 그러한 성장이 모든 사회에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선의, 감정이입과 공감의 능력 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준행되는 도덕과 규범의 수준과 같은 문화적 요인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비도덕적 가족주의라는 분석의 틀과 가설을 가지고 진행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 주민과 가정 및 사회의 심리학적 실상의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인식 차원에서부터 다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해 준다. 정상적이라면, 북한의 가정을 통해서도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잘 협력하고 함께 혁신을 도모할 수도 있는 인력이 배출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한 바람직한 모습과는 큰 괴리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북한의 사회심리적 상태를 반추해 보았을 때,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이 직계가족을 넘어서는 타인들과 신뢰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조성해 가거나 지역사회 등의 공공 및 공동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직계가족이 아닌 타인의 탈북을 도운 적도, 또 그러한 일들을 위해 협업하거나 조직에 가담하여 도우려 한 적도 별로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북한에서 살 당시 친척과 이웃 및 사회에서 믿고 신뢰하는 분도, 또 직장에서 존경하고 따르던 상급자 또는 선배도 별로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 있을 당시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 집단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과반수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또 전체 중 62%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의 주민으로서 공적인 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심지어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은 북한 사회에서 공공가치가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는지를 말해 준다고 하겠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협소하게 정의된 자신의 물질적인 이익과 안녕만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리더들이 될 만한 고학력자들 역시 책임감이나 소명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공인인 정부나 당국의 관리의 경우에도 처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때 법을 무시한다는 것이며, 처벌을 받지 않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경우 뇌물을 받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가 뇌물을 받고 있고 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 사회의

병리적 심리상태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사실은 그렇게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이 결핍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시장에서 금전거래를 기반으로 동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웃과 타인을 희생하더라도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배타적으로 우선시하고 있다는 현 실태를 감안하여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Banfield(1958)가 이탈리아의 남부 지역에서 목격한 바와 같이, 신뢰와 협업과 조직을 통해 공동이익이나 공공가치를 추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비도덕적 가족주의적인 사회심리 상태가 만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대내외 환경이 변화되거나 향상된다고 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서로를 돕는 행위를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배경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매우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sup>6)</sup>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자살한 북한이탈주민은 16명으로 전체 사망 탈북자 175명의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인 평균 자살률인 5.9%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살률은 한국 사회에서의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취급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사실은 병리심리학적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2014년 보고서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살, 살인, 고문, 강간, 강제낙태와 강제노동 등 인권탄압에 대해 “심각한 정도와 규모와 본질 면에서 현대 시대의 유사 사례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다(Human Rights Watch, 2016 참조). 그러나 북한 주민의 실존적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복원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수단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쉬운 답도 컨센서스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인간안보 등과 같이 그 뜻과 동기가 선하고 정의로운 경우에도 예컨대 경제제재를 통한 북한 체제의 붕괴라는 처방을 내린다면 그러한 처방이 반드시 이롭기만 한 것은 아닐 수 있겠다.<sup>7)</sup>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하거나 터널 비전을 가지고 처방을 강행한 경우 그 처방이 초래한 결과가 본래의 문제보다 오히려 더 나쁠 수 있는 것이다.

6) 『IBS뉴스』, 「자살률 세계 1위 한국, 북한이탈주민 자살률은 더 높아」, 2012. 10. 24.

7) 1994년의 북핵 위기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물질 생산을 막기 위해 정밀 공중공격을 계획했던 일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러나 결국 그 계획이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는데, 그 이유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작전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그 결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통제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이었다. 정밀 공중공격 작전은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결심 없이는 실행할 수 없는 대안이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한국전쟁이 세계 역사의 흐름에 끼친 영향이 매우 지대하였듯이—한국에서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꿔 놓을지도 모르는 큰 위험이 수반될지도 모르겠다.

## V. 정책적 함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주민의 사회심리적 병리상태는 난민이 가지고 있는 병리적 심리상태의 문제를 넘어서는 수준인 것으로 사료된다. 난민들은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증후군 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설사 이들을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으로 옮겨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병리상태가 자연적으로 치료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랜 기간 난민의 병리적 심리증상을 치료한 의료계의 상식이다. 하물며 참혹한 인권 침해와 기아를 겪어 온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심리상태가 결코 난민의 그것보다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주민들을 정상적인 경제주체로 바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자체가 좌시할 수 없는 도전과제이며, 별도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적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야 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고 살펴본 사실은, 북한 주민들은 직계가족을 넘어서는 타인을 잘 신뢰하지도 않고 또 서로 협력하여 보다 건설적인 상생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내기도 어려운 사회심리적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덕적 가족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정신적 병리상태는 당연히 자연스럽거나 정상적인 사회상이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북한 정권의 성격이나 행태가 어느 순간 바뀐다고 가정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저절로 혹은 스스로 서로 신뢰하는 시장경제를 만들어 발전을 도모해 나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단순히 자본을 투입한다든지, 한국과 제도를 통합한다든지 하는 등의 접근법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 결과의 함의에 기반한 몇 가지 주요한 정책적 제안을 생각해 본다면 다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보다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북한 주민의 역할 모델(role model)을 다수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회병리적 상황에서 개개인이 자신과 직계가족의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조금 더 장기적인 상생의 미래를 생각하고 추구할 수 있게 하는 데에는 역할 모델이 효과적이다(Merton, 1936 참조).

한국은 1997년 1월부터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유지해 오고는 있으나, 북한 주민들 특히 자라나는 세대가 삶을 모방하고 싶은 역할 모델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의문이 존재한다. 여러 상황적 요인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발생과 입국을 유도하거나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바람직한 역할 모델로 성장 및 발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디자인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국내에서는 물론 국외에서도, 국제기구 및 미국과 유럽 등의 다양한 행위자와 함께, 특히 1.5세대 및 2세대 북한이탈주민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등의 성공을 위한 모든 가능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이끌 차세대 리더가 배출될 것이고, 그러한 역할 모델의 부상은 북한 사회로 하여금 근시안적인 사고와 배타적 이기심과 불신 등으로 표출되는 사회심리적 병리상태를 넘어서서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창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모든 가능한 기회를 이용하여 북한 주민들의 주인의식이 배양될 수 있는 발전과, 그러한 발전과정을 상상하고 계획하여 실현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국내의 주요 국책연구기관들은 통일을 대비하는 연구보고서에서 주로 제도 통합의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제시하는 구상과 정책 제안들은 대부분 한국의 성장 동력의 확보 등을 위한 수단적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 한국의 성장이 핵심 정책목표가 되고 북한 지역 주민들은 마치 기계적인 생산요소적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취급하는 접근법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북한 주민들의 내면에 신뢰를 심고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관점에서 북한 지역과 경제사회의 발전이 기획되고 실행되어야 북한 주민들이 사회심리적 장애를 극복하고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인적, 물리적 및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포용적인 발전 과정이라야 북한 주민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이 확보될 것이고, 북한 사회를 선도할 성공적인 역할 모델들도 다수 육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위와 같이 북한 사회의 현 실태를 감안한 발전 전략과 정책을 설계하고 또 실행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한국의 정책결정자,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및 시민들의 관련된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는 것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자본과 기술 등 생산의 요소만 주어진다면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시장 등에서의 접촉과 교류가 많이 일어나기만 하면 신뢰관계나 신뢰가 기반된 거래질서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정부나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신뢰하지도 못하고, 주체적으로 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적으로 참여하거나 기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설사 경제체제와 제도의 통합을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이나 그들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VI. 결 어

본 연구는 비도덕적 가족주의라고 하는 분석의 틀을 가지고 2003년 이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2016년 중반기에 실시한 실태 조사를 통해 북한의 사회병리적 신드롬의 여부와 정도를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르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모든 정책 수립의 시작점은 정확한 실태 파악일 것이다. 자료와 정보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직접 조사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제대로 북한을 방문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비록 완전한 대체가 될 수는 없겠지만,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 북한 사회의 현실이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려고 하였다.

북한의 사회심리적 병리실태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정확히 분석해야 할 정책적 필요가 있고, 이는 책임 있는 정부라면 더 이상 지연시키거나 간과할 수 없는 과제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상태에 대해서 깊이 분석하고 파악하여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이 북한의 중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요건이라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비도덕적 가족주의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시장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현명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효용성이 크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북한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자원과 기술의 조달 및 제도 통합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사회문화적 차원의 한계와 장애에 부딪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 간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지 못하는 문화적 문제가 북한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다 선제적인 정책적 대응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렇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정책적인 대응을 하려면 그러한 도전과제의 성격과 사이즈에 대한 명료한 인식과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북한 지역의 발전 전략과 정책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도 북한 사회의 정신병리적 실태를 심분 감안하여 디자인하고 실행에 옮겨야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주인의식도 배양될 수 있을 것이고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와 함께 공정 경쟁이 담보되고, 자율과 함께 책임성이 주어지며,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함께 공익성과 공공가치의 수호가 균형 있게 추구되는, 상식이 통용되는 시장경제의 원칙이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적 시장경제 기본 원칙의 재정립과 준수, 그리고 제도화가 기본이 되는 것이 방향성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말인데, 이는 누가 무슨 자리를 차지하는가라는 힘의 논리를 넘어 수평적 네트워크의 차원에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또 각기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버넌스 시스템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그러한 철학과 정책적 노력이 만날 때, 적지 않은 북한 주민들이 무력감과 불신 등 정신적 병리상태를 던고 일어나 차세대 북한 주민들이 우리러볼 수 있는 역할 모델로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북한 사회의 문화를 그 뿌리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길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진정한 북한 주민의 인권 회복도 이룰 수 있는 첩경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동엽 외, 『동북아의 변화동향 평가 및 전망』, 세종: KDI국제정책대학원, 2015, pp.161~175.
- 『자유아시아방송』, 「북한 자살률 낮은 이유 알고보니…」, 2011. 9. 19.
- 전홍택,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운영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13.
- 한국개발연구원, 2016년 북한이탈주민 실태 조사, 2016.
- Acemoglu, Daron and James Robinson,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New York: Crown Business, 2012.
- Banfield, Edward, *The Moral Basis of a Backward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1958.
- Bennett, Bruce,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13.
- Coleman, James, *The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 Everad, John, *Only Beautiful, Please: A British Diplomat in North Korea*, Stanford: Asia-Pacific Research Center,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at Stanford University, 2012.
- Fukuyama, Francis,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The Free Press, 1995.
- Gunjal, Kisan. *et al.*,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3.(<http://documents.wfp.org/stellent/groups/public/documents/ena/wfp261353.pdf>)
- Haggard, Stephan and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Markets, Aid, and Re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 Haggard, Stephan and Marcus Noland, *Witness to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1.
- Hobbes, Thomas, *Leviathan*, London: J.M.Dent & Sons, 1987[1651].
-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2016,” 2016.  
(<https://www.hrw.org/world-report/2016>).



- 『IBS뉴스』, 「자살률 세계 1위 한국, 북한이탈주민 자살률은 더 높아」, 2012. 10. 24.
- Kim, B. and Roland M, “Scenarios for a Transition to a Prosperous Market Economy in North Korea,”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26(3), 2012, pp.511~599.
- Merton, Robert K, “The Unanticipated Consequences of Purposive Social 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6), 1936.
- Natsios, Andrew, *The Great North Korean Famine: Famine, Politics, and Foreign Policy*,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1.
- Niederhafner, Stefan, “The Challenges of Reunification: Why South Korea Cannot Follow Germany’s Strategy,” *Korea Observer*, 44(2), 2013.
- North, Douglass,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North, Douglass and Robert Thomas,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A New Economic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 Park, Hun Joo, *Amoral Familism in North Korea? 2016 DPRK Country Report*, Sejong: KDI School Press, 2015.
- Putnam, Robert D.,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Putnam, Robert D.,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00.
- UNHCR, “Trends at a Glance: 2015 in Review”, 2016.  
(<http://www.unhcr.org/statistics/unhcrstats/576408cd7/unhcr-global-trends-2015.html?query=2015%20in%20review>).
- Sen, Amartya,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Alfred A. Knopf, 1999.
- Sheinkman, Michael, et al., “Special Report: WFP/FAO/UNICEF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1.  
(<http://documents.wfp.org/stellent/groups/public/documents/ena/wfp233442.pdf>).
- Smith, Adam, *Wealth of Nations*, New York: Penguin, 1986[1776].
- Smith, Adam,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 Amherst*, New York: Prometheus Books, 2000[1759].